

“직속기관 지역별 편중 심화”

최영일 도의원, 교육위 업무보고서 “교육인프라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재배치 심도있게 검토를”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별 편중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도교육청이 산하 12개 직속기관을 시·군 단위에 집중시켜, 동등한 건전한 교육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방해해 왔다는 것.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0일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직속기관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특히, 화령기에 접어들어 인구 감소가 이와 관련돼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지역별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해아리지 못한 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도내에서 생활권역시설과 교육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정책과 특히, 교육평준화정책 등 균형발전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최영일 의원은 “직속기관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직속기관을 지역별로 편중시킨 것은 모순만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 감소가 확인되려 나갔고, 인구유출과 함께 도내 지역 대부분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인프라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아, 그나마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만 도민들이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시·군 단위로 생활권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의원은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지역희생을 위해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영일 의원은 “전북도와 협력해 교육·환경 혁신지원 방안과 재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기반시설·교통, 인구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도내 인구종합대책 등을 마련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 직속기관 재배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산업적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도내 교육균형발전을 가져와 도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는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민주당 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 극복 핵심”

민주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 개혁 추진 의지도 다잡았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주호영 ‘박지원 적과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문 대통령,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 할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가리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박 후보자의 인사문화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고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뉴스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상임위 하반기 업무보고

“코로나19·여름 장마 대비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문건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0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의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안전기금의 과지출을 우려하며 여름철 장마 재해에 대비, 재난안전기금의 확충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안전과 직결된 산업단지 예찰, 승강기 점검, 수질검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지출된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 장마 피해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할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은 아의 무더위 위험도 운영을 교부세만 의존해 시·군별로 일부만 지원해주는 사업 방식을 지적, 시·군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체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추후 기금미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재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오평근 의원 “산단 사고 없도록 예찰단 운영 만전”

이병도 의원 “비상급수시설 수질 전수조사 해야”

오평근 의원(전주2)은 전북도가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14개 시군 안전지수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의 상반기 실적에 대해 지적, 하반기에는 CCTV설치에 집행하고 있는 만큼 설치된 CCTV가 제대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지 의원(전주8)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비 대부분을 시군별 CCTV설치에 집행하고 있는 만큼 설치된 CCTV가 제대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승강기 안전점검 및 관리상태를 지적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도민들을 대

상으로 한 대응훈련을 조속히 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범, 김영민, 건축, 부동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원충원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의 인원이 현재 산업단지 대비 적다고 지적, 대형 손실을 예방하려면 예찰단 인원을 증원, 예찰 활동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내 지역 안전지수의 시군별 편차를 지적하며 지역안전지수 취약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차별화된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전수조사를 주문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도내 해수욕장, 시외버스터미널, 야외 관광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촉구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안전한 밤거리를 위하여 14개 시군에 설치된 가로등이 시군 자체 수동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지자체 노력 필요”

한복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7일과 20일 2020년 하반기 실무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정책질문에 돌입했다.

첫날인 17일에는 환경복지국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20일에는 복지여성보건국 및 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상반기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의 조속히 처리에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도 집하장 등 관련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마사회 분사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어떤 역할도 없는 상황이다”면서 “전북도가 승마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사회 분사 및 경마

이명연 의원 “도 자체 사업으로도 집하장 등 설치될”

김만기 의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14개 모든 시군에 도입해야”

장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오 의원은 “건강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급히 서해안 지역의 수질개선이 해결 돼야 된다”며 “서해안 및 새만금 지역 수질 악화의 대표적 오염원인 축산관련 시설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의원은 “심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9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심혈관질환의 경우 신속한 전조증상 파악이 필수이므로 14개 모든 시군에 관련 사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기학 의원은 “최근 군산 국가산

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불법 적치된 다량의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도내 휴·폐업 공장 등 건물 내 불법 적치된 폐기물의 현황 파악 및 야외에 적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금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경우 현재 소유주의 자가측정 결과가 종합정보망에 입력된다”면서 “이 경우 소유자 입맛에 맞춰 측정치가 조작될 우려가 있어 더 적극적인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 등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용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의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축산폐수처리업체의 난립과 지도·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면서 “축산폐수처리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발전과 직결 도전적 과제 설정 필요”

행자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기획조정실 등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최근 몇 년간 수백 개의 직무성과평가(BSC) 지표 달성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난이도 설정 등에 있어 너무 쉬운 목표만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지적한 뒤 도정발전과 직결되는 진척이 되고 도전적인 과제설정이 필요함을 강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직무 성과평가가 개인성과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칫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승수 문제 등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 “지역특성 반영 전북형 뉴딜 발굴 매우 중요”

홍성익 의원 “한국형 뉴딜 대응 정책추진단 외부 전문가 발굴해야”

아울러 도 페이스북에 캠퍼리대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남권 해양풍력 발전사업 등이 무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

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젊은이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각 1건씩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서남권 해양풍력발전 등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보완 대책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익 의원(비례)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도 뉴딜정책추진단이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련 실무진은 부족해 보이는데 전문 식견을 가진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에 적합한 뉴딜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성 기자